

총 평 : 권 성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자리를 지키며 발제를 들으시고 토론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의견을 들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구제보도문의 크기 및 위치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6월 충남 부여에서 중재위원워크숍을 했습니다. 여기 참석해 계신 어경택 위원께서 실제 사례를 근거로 정정보도문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발제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검토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 볼 계획입니다. 또 지난번 워크숍을 마친 뒤에 중재위원 여섯 분을 모시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4차례 회의를 통해 상당한 정도로 피해구제보도문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을 분석하였고, 이미 개략적인 보고서 구성을 마쳤습니다. 한 두 차례 회의를 더 가진다면 보고서가 완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나오면 그 내용을 규칙에 반영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좀 더 실효성을 가지도록 실무적인 마무리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에 앞서 언론사 관계자들이나, 중재위원들의 협조를 구해 그것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먼저 주요 언론사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할 생각이며, 그 이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조만간 구체적인 해결책이 나오리라 생각하며, 또한 언론인권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배상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언론사를 압박하

여 굳이 손해배상액을 많이 올려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손해배상 금액이 올라가면 그야말로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손해배상 금액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져 언론사에 대해 실질적인 배상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액을 많이 청구하라고 먼저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는 그 흐름에 맞추어 적절한 균형을 취하기 위해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언론사 관계자들께서 깊이 이해하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우선 증거조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사실관계가 애매하면 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권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방법의 증거조사가 필요하며,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증거조사를 적절히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증거방법에 따라 위원회로서는 전문적인 감정을 요하거나 외국의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듣는 것처럼 불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의 증거방법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사태의 진상이 드러나면 손해배상을 권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행 법률에 규정된 14일의 조정 처리기간이나 21일 이내로 명시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기간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 처리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증거조사는 적절하게 시행하도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를 위해 1~2개월을 소요하는 것은 관련 법률의 정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필요에 따라 증거조사에 1~2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비해 위원회가 3~4차례 기일을 속행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필요한 정도의 증거는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몇 주 전에 임병렬 부장판사님께서 위원회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증거조사에 대한 강의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전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등 어느 정도의 준비는 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회와 법원을 통한 손해배상액수 비교가 다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량적으로만 본다면 위원회를 통한 손해배상액은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 그 이유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원회 증거조사의 결여입니다. 증거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호한 사실을 가지고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둘째는 위원회와 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법원에 제소되는 사건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사건입니다. 주로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사건은 법원에 제소되는 중대한 손해배상사건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비교되는 사건의 성질이 다름에서 오는 액수의 차이임을 참석자들에게서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다만, 종전에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정정보도나 반론보도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도용으로 활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손해배상을 취하하도록 권유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또 신청인이 언론사를 상대로 적은 금액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상징적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0, 15만원 정도의 액수는 일반 상식에 비취볼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커지고 있는데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해배상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용하자고 하는 것이지 언론사를 압박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수를 높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서 이정명 위원님께서 손해배상액수 기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위자료에 대한 확정적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이미 수십 년 동안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나름의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개는 선례가 기준이 됩니다. 동종 또는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조사를 해서 선례와 균형이 맞게 손해배상액수를 인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선례를 조사해서 그 사건과 비교해 경중을 따져 상식선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저도 2008년 첫 임기를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정리할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한 팀장에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따라야 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그 결과 '손해배상액산정표'라는 기준을 만들

었습니다. 크게 12가지 항목으로 구성하고 각 항목마다 3~4개의 세목으로 분류하여 각 세목마다 배점을 하고 조사관들로 하여금 채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관의 자의적인 채점은 곤란하므로 점수부여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1년 동안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이미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남은 과제는 조사, 분석한 자료를 기초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어떻게 확정적인 손해배상 산정표를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만간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리라 믿습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산정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안이 다르고 중재위원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을 분리해 전담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현재 포털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전담부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이 독립적으로 청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정정보다나 반론보도와 연계되어 청구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만 별도의 사실로 인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이때 문제된 사실을 기초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만을 분리하는 것은 너무나 작위적이므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제도 운영과 관련해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서 제가 인사말을 하면서,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세계 유일한 제도이며 훌륭한 제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화자찬이라 생각하실 수 있으나,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은 위원회의 신뢰성에 대한 확신과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이미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출범당시 군사정권에서 만든 제도이므로 언론탄압을 위한 도구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과 의심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간 많은 제도들이 명멸해 갔지만 위원회는 오랜 역사를 갖고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들은 이 제도가 비교적 성공한 제도라고 인식을 공통으로 갖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언론조정중재제도는 지난 30년간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내 왔고, 앞으로도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기자협회 우장균 회장님 말씀처럼 과거에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 불신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한 이후로는 외부의 압력성 청탁이 전혀 없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참석자들 모두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